

자유언론 실천운동 30년

문영희 동아투위 위원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재야인사들이 농성장인 편집국을 방문, '회사측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오 해 3월 17일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가 결성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아투위 생존 동지 101명(12분은 이미 고인이 됨)은 한 세대에 걸친 '자유언론운동 30년'을 회고하며 깊은 감회에 젖는다. 지난 1970년대에 엄혹했던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우는 한편, 동아일보 경영진과 동시에 싸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새삼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비록 당시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투쟁이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했고, 나아가 언론개혁운동의 씨

앗이 되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동아일보는 1960년대 초부터 견습기자를 공채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동아투위’ 사람들은 공채 1기부터 13기(‘동아사태’ 2년 전 입사자)까지 광범하게 걸쳐 있다. 1년에 한번 기자 공채를 실시했다면 13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매년 실시되었던 동아일보 기자 채용 시험은 늘 1백 대 1 정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

젊은 기자들 가운데는 4·19혁명을 겪고, 한일굴욕회담 반대시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았다.

동아일보 노조 탄생

어느 시인이 ‘겨울공화국’이라 불렀던 그 시절의 절대 권력자 박정희는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질 뻔 했다. 공식 발표 결과는 97만여 표의 차이였지만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국민여론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박정희는 대선 이전부터 유신체제를 구상했고, 선거에 지더라도 물러날 것 같지 않았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계엄통치를 할 것이란 소문이 선거 이전에 이미 언론가에 퍼져 있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그는 그해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때부터 언론은 명실상부하게 중앙정보부의 장악 아래 놓였다. 71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언론자유 수호 선언’을 시작한 이래 격변기마다 세 차례의 ‘수호선언’을 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간부들은 이미 기관원들의 눈치에 익숙해 있었고, 경영진은 ‘회사가 살아야 한다.’며 젊은 기자들의 경고와 건의를 묵살하기 일쑤였다. 젊은 기자들이 생각해 낸 저항수단은 노동조합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거사했다.

1974년 3월 8일 오전, 철저한 비밀 속에 추진해 오던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서울시청에 신고했다. 신고필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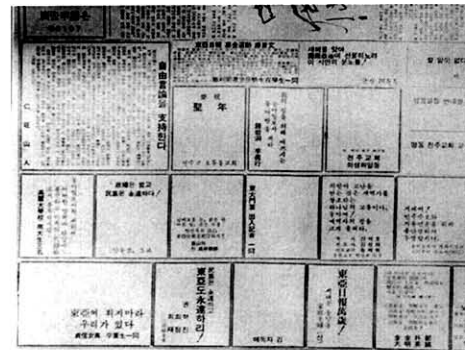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

1974년 10월 24일은 유엔데이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공휴일이었다. 공휴일이라도 신문은 발행되기 때문에 외근기자들까지 모두 출근했다. 오전 9시 편집국에서는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분회장 장윤환) 주최로 비상총회가 열렸다. 극비로 준비해 오던 일이라 대부분의 기자들은 총회 개최의 취지를 알지 못했다.

이 때 발표된 선언문이 ‘자유언론 실천선언’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



기업광고가 사라진 동아일보 지면을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채우고 있다.



단식농성 중 폭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온 기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기다리고 있다.(왼쪽) 동아일보 앞에서 도열시위를 마친 해직기자들은 늘 줄을 지어 신문회관(현재 프레스센터)을 지나 조선일보 근처에서 해산했다.(오른쪽)

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
음과 같이 결의한다.

-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위 선언문에 나오는 ‘자유언론(Free press)’이란 표현은 당시로서는 좀 생소한 것이었다. 언론학계나 선진국에서는 자주 쓰이는 말이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언론자유’란 말이 더 익숙했다. 자유언론은 기자들 스스로의 실천과제라고 설정한 기자들은 편집국 안에 지면 감시기구인 ‘자유언론실천특위’를 조직하고 매일 지면을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알림’이란 유인물을 통해 편집국 전 부서에 회람시켰다. 이때부터 동아일보 지면엔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종교, 재야, 학생, 노동, 야당 등의 목소리가 비록 작은 단수

였지만 지면에 반영되었다.

그해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명동성당에서 열었던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기도회의 기사화를 둘러싸고 기자들은 회사 측과 크게 충돌했다. 기사의 단수 크기가 문제였다. 신문 제작을 늦추면서까지 기자들

은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다. 박 정권은 크게 당황했다. 12월 20일이 지나자 단골 광고주들이 동판을 회수해가기 시작했다. ‘무서워서 더 이상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변명이었다.

1975년 백지광고

연말부터 동아일보가 광고 없는 신문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된 민주인사들과 시민들은 앞을 다투어 돈을 들고 찾아와서 광고 면을 사주기 시작했다. 민주시민들의 의견 광고가 광고 면을 채웠다.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등 유신체제를 증오하고 자유언론을 지지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독자들을 즐겁게 했다.

회사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1975년 3월 12일 ‘경영난에 의한 기구 축소’라는 구실을 내세워 12명을 무단해고 조치했다. 기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봉급을 깎아서라도 함께 일 하겠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기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회사 측의 태도를 보면서, 어쩌면 이면에서 권력과 흥정을 벌이며 기자들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언론의 실천을 위하여 역사에

순(殉)할 결단을 내렸던 기자들은 즉각 편집국에서 제작을 거부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23명은 편집국 아래층의 문선공장을 장악하고 단식농성을 펴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방송국에서도 피디, 아나운서 등이 제작 거부에 동참했다.

이 사태는 정확히 5일 동안 지속되었다. 회사는 3월 17일 새벽, 신문 가판원과 태권도 유단자 등 2백여 명을 동원하여 2층의 단식농성 기자팀, 3층 편집국의 농성 기자팀, 4층의 방송 제작팀을 차례로 끌어들였다. 밖에서는 경찰이 배치되어 외부인사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다. 바로 동아일보사와 권력이 야합했다는 생생한 증거, 바로 그것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기자들은 다음 날 신문회관 복도에 모여 동아투위를 결성하고 끝없는 자유언론수호투쟁에 들어간다. 이때 동아일보 기자 정원의 2/3 정도가 참가하였다. 투위원들은 다음 날부터 '우리의 주장'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매일 9시부터 회사 앞에 도열하여 출근하는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편,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동아일보의 죄악상을 알리는 일에 주력했다. 이 도열 시위는 그해 9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1979년 봄부터 대학 등 도처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제도언론은 철저히 외면했다. 동아투위는 투옥을 각오하고 '민주민권일지'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각계에 배포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줄줄이 투옥되었다. 그들은 1979년에 박정희가 암살당하자 석방되었다.

중단 없는 자유언론활동

동아투위는 1977년 말 조선투위와 공동으로 '민주민족언론'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골자는 '민중에게 자유를, 민족에게 통일을'이다. 이 선언을 전환점으로 삼아 제도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언론운동협의회(언협)'의 결성이었다. 언협은



95년 언론노조는 동아투위에게 '민주언론상'을 수여했다.

1986년 6월에 월간 『말』을 창간, 군사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제도언론의 실상을 알리기 위하여 전두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방법인 '보도지침'을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또 많은 동지들이 옥고를 치러야 했다.

동아투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87년 가을 조선투위와 80년 해직 동지들을 규합,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신문을 창간했다. 또 기자협회, 언론노조 그리고 PD연합회와 공동으로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제정하여 매년 10월 24일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동아투위 결성 30주년 기념행사

동아투위는 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유언론운동 30년사'를 발행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도움으로 '사진으로 보는 30년사 영상물'도 제작 중이다. 이 행사는 이번 달 17일 오후 6시부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다.

동아투위원들은 비록 이순의 나이로 접어들었지만 자유언론 수호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언론은 기자들의 실천과제라는 '10·24정신'을 후배 기자들이 몸소 실천하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